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부, 설 민생대책 발표

등유 바우처 2배 오른 64만 1천원
저소득 전세사기 피해자 무이자 융자
성수용품 공급 확대 최대 60% 할인

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바우처) 단가가 올라간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의 설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4월까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가 기존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올라간다. 에너지바우처란 소득 기준과 기타 기준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에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나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최근에 가격이 급등한 등유에 대해서는 소년·소녀 가장과 한 부모 취약가구에 지원하는 등유 바우처 단가를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기존의 2배를 넘는 수준까지 올린다.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가구 수요를 고려해 연탄 쿠폰도 당초 계획보다 추가로 지원한다.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는 난방비를 월 30만

~1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식비·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 부문별로 지원을 강화한다. 월 4만원 상당의 농식품 바우처 대상은 4만 8,000가구 이상 확대하고,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는 무료 서비스로 전환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지급액도 늘린다.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는 설 명절 전에 자동으로 재충전한다. 올해 2분기에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출시한다.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대출 연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되, 연 3,000만원 이하 저소득자는 무이자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설 명절 전에 하도급 대금이나 계약 대금이 지급되도록 장려하고,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책은행 등을 통해 약 39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기부에 대한 혜택은 더욱 늘린다. 세제 지원 대상인 자원봉사 용역 기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고액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제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연휴 기간인 1월 21~24일 4일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는 면제한다. 이 기간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수송을 보강한다. 경북공 등

공·농 유적지 22곳도 이 기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연휴 기간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맞벌이·한부모 가정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는 정상 운영한다. 1월 한 달간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카드형) 할인율이 5%에서 10%로 올라간다. 할인구매 한도도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배추와 무, 돼지고기, 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의 가격은 최대한 작년보다 낮게 유도한다. 이를 위해 배추와 무, 사과, 소고기·돼지고기, 명태, 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을 20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0만8,000톤을 공급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에도 300억원을 투입, 최대 60%까지 할인을 시도한다. /연합뉴스

분양가 무제한 중도금 대출 허용...청약규제 풀다

유주택자 '줍줍' 청약 허용
'빌라왕' 전세사기 대응 강화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경착륙과 미분양 확산을 막기 위해 중도금 대출 규제와 특별공급 등 청약 관련 규제를 대거 해제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전세사기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분양가 12억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당초 9억원 이하로 제한했던 중도금 대출을 지난해 11월 말 12억원 이하로 완화했는데, 올해는 아예 이 규정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1인당 5억원까지 제한했던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기한다. 국토부는 늦어도 3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정과 은행시스템을 손질해 1분기 내에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공급의 분양가 상한 기준도 사라진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경우 다자녀 등 특별공급 대상 물량에서 배제하고 있다. 국토부는 2월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분양가 제한을 없앤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서울에서 전용면적 85㎡ 중형도 특공 물량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는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2월 중으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청약을 허용할 방침이다.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기한다. 국토부는 당초 6개월내 팔아야 하는 것을 최근 2년으로 완화했으나 이

또한 아예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다음달 중으로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청약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반기 시행한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청약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 최근 속칭 '빌라왕' 사건 이후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전세사기 대응에 적극 나선다.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선순위 권리관계와 납세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임대보호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여기에서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임대차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조회 권한을 부여해 이달중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입신고 효력 발생(다음날) 전에 임대인이 담보대출을 받아 은행의 근저당권이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우선하게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연합뉴스



대우에이피는 '희망 이웃사랑 나눔운동'을 통해 지역 소외계층 100가구에 김치와 생필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대우에이피 제공

대우에이피, 6년째 이웃사랑 실천

전북 완주 봉동읍 나눔 활동
김치·생필품 100가구에 전달

대우에이피는 '희망 이웃사랑 나눔운동'을 통해 지역 소외계층 100가구에 김치와 생필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대우에이피 관계자는 "올해 햇수로 6년째 진행 중인 희망 이웃사랑 나눔운동은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시작한 나눔 행사"라며 "대우에이피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회공헌 활동이 아닌 지역사회와 이웃들을 위한 나눔활동을 꾸준히 펼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범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에이피는 국내 1위의 자동차 스티어링 휠 제조회사로 국내 완성차 업체의 1차 협력사로서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혁신기업으로, 지난해 7월 '2022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획득에 이어 지난 12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노사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오지현 기자



농협광주본부는 4일 한국새농민 광주시회와 함께 남구 양림동에 있는 '젊은이 따순 밥집'에 사랑의 농산물을 전달했다. /농협광주본부 제공

광주농협·지역 한국새농민회, 농산물 기부

양림동 '젊은이 따순 밥집' 방문
농협광주본부는 한국새농민 광주시회와 함께 남구 양림동에 있는 '젊은이 따순 밥집'에 300만원 상당의 사랑의 농산물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젊은이따순 밥집은 양림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 까리따스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식당으로, 힘들고 지친 청년들을 위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저렴한 가격의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고성신 본부장과 노흥기 회장을 비롯한 한국새농민 회원 10명이 참석했

며, 한국새농민회 광주시회 회원들이 직접 배·수확한 햅쌀과 배, 토마토, 가지, 호박, 감, 부추 등 우리 농산물을 젊은이 따순밥집에 전달하고 '따순밥'에 온기를 더했다. 고성신 본장은 "농업인의 대표 단체인 한국새농민회와 함께 우리농산물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농협광주본부는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랑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성진 기자

"반도체 시설투자 세제 지원 강화 환영"

중소기업계 "투자 활성화 기대"
중소기업계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기로 한 정부 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지원은 유례없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단초가 될 것으

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반도체는 9년 연속 수출 1위 품목으로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한 산업의 쌀"이라며 "국제 반도체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반도체 조강대국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리인상 등으로 시설투자에 어려움

을 겪던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의 16%의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확대한 것은 복합 경제위기 극복과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 강화 관련 법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도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 확대 등을 통해 우리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홍승현 기자

연말정산, 신용카드·대중교통 공제 확대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월세·기부금 공제 늘어나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와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해 이뤄지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근로자가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작년보다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4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에 새로 적용되는 개정 세법 내용을 안내했다.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다. 난임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3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했다. 작년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작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열리며, 근로자는 이날부터 간소화자료를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이연수 기자